

지역예산 확보 시급한데 '총리와 만찬' 절반 불참

'반쪽간담회' 광주 국회의원들 반축

박주선·조영택·장병완·김동철 의원 4명만 참석

내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한 지난 22일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만찬 회동에 광주 국회의원들이 절반이나 불참, 빙수를 사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치열한 예산 확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김 총리와의 회동에 광주 국회의원들이 절반만 참석한 것은 안이한 현실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지난 22일 만찬 회동에는 박주선, 조영택, 장병완, 김동철 의원

등 4명이 참석하는데 그쳤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과 광주시당위원장인 김재균 의원,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 5선 의원인 김영진 의원은 불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김 총리와 만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며 "민주당 예결위 간사라는 점에서 김 총리를 만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이 예결위 간사이기도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에

서 내년 예산 문제와 관련, 총리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광주시당위원장인 김재균 의원과 최다선 의원인 김영진 의원의

원과 최다선 의원인 김영진 의원의 불참에 대해서도 시선이 고지 않다.

내년 국고 예산 확보와 관련, 그 누

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

다는 점에서 개인적 일정을 이유로 당일에 회동 불참을 결정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용섭 의원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영수회담과 관련, 청와대와의 실무

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회동에 참석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와의 '반쪽 회동'은 광주 국회의원들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힘과 지혜를 모아가기 보다는 미묘한 반복과 불신 등으로 지지율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총리와의 회동에 광주 국회의원들이 모두 몰려갈 필요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각종 현안에 나타나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무기력"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총리 '캠프 님불' 방문

23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내 반환 미군기지인 옛 '캠프 님불'을 방문한 김황식 총리가 반환 기지 내 공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막오른 한나라 전대…7인 후보 열전 돌입

27일 광주서 정견발표 표심잡기

오늘부터 비전발표회·TV토론 등 '릴레이 유세'

한나라당의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7·4 전당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간 당권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후보등록에 이어 24일부터 열흘간 선거인단을 상대로 한 비전발표회와 TV토론 등을 벌인 뒤 다음달 4일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 위원회 5명(여성 2명)을 선출한다.

비전발표회는 24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25일 부산·울산·경남권 ▲27일 광주·전남·전북·제주권 ▲28

일 대전·충청권 ▲7월 1일 강원권 ▲7월 2일 서울·수도권 등 6개 권역별로

나뉘 '릴레이 유세' 방식으로 이어진다.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될 광주·전남·전북·제주권 후보자 비전 발표회에는 황우여 대표 최고위원 권한 대행과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김수한 선거관리위원장이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각 시·도당 위원장 1인500여 명의 당원 선거인단이 참여해 후보들의 열띤 정견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지상파와 케이블TV 등을 통해 5차례 실시될 TV토론은 후보별 정견발표와 당 쇄신·화합, 복지 정책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상호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전대에서는 당의 혜신과 함께 등록금·주가경제 치열화·무상급식·한미 자유무역협정(FTA)·대북정책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계파별로 내부 교통정리와 후보 간 합종연횡을 위한 물밑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의미와 함께 내년도 총선·대선 관리와 선거 지휘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 만큼 당내 세 세력 간 각축 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대 출마자는 남경필·홍준표·권영세·박진·원희룡·나경원·유승민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이날 후보등록을 마친 뒤 곧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대에서는 당의 혜신과 함께 등록금·주가경제 치열화·무상급식·한미 자유무역협정(FTA)·대북정책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계파별로 내부 교통정리와 후보 간 합종연횡을 위한 물밑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년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 확보와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권의 총력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 출신의 김 총리가 힘을 실어준다면 광주·전남 지역 국고 예산 확보에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당 출신의 김 총리의 부처 장악력이 상당한데 그동안 무난하게 국정을 쟁기면서 이 대통령의 신임도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22일 방사광가속기 사업, 상품거래소 유치 등 대통령의 정

광주·전남 예산확보

김총리 역할론 대두

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김 총리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광주 국회의원들도 이날 저녁 김 총리와 만찬을 갖고 내년 광주시의 국고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조만간 김 총리를 만나 전남의 현안 사업과 예산에도 관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김 총리는

"광주와 전남의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은 나타낸 것

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장 출신의 조영택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최종 예산을 청와대에 보고하기 전에 국무총리와 협의를 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총리가 나름대로 지역 현안 사업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고예

산 확보와 관련, 김 총리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총리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로 보기 어려운데다 총리라는 자리가 예산을 직접 행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엔 여권의 경제와 야권의 공세에 시달리다 보면 지역 예산 등을 행할 수 있는 여유를 좀처럼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는 '총수 높은 삼촌'처럼 권한은 제한되고 명예만 높은 외로운 자리"라며 "그래도 김 총리의 고향이 전남이라는 점에서 지역 국고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저축銀 비리' 국調 착수

여야는 23일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정조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조사법위에는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및 후순위 투자자 피해 현황 및 피해 대책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횟수 추진계획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들의 사전 예금인출 경위 및 조치 ▲저축은행 제도 개선 대책 등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정책결정 과정과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 등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 규명 문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를 제택, 내달초 본격적인 국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에 대한 입장차로 국조계획서 제택 과정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증인 협상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7월 중순에서야 국정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저축은행의 정·관계로 로비 부분이 빠져 있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김 빠진 국정조사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또 문이 열린 사무실에서 돈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무혐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취업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강력부(심재천 부장검사)는 23일 피고인인 신분으로 조사한 윤 의장에 대해 '혐의의 없음'으로 불

성을 내렸다. 윤 의장에게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줬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조사했지만, 윤 의장이나 주변인이 이 수표를 사용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윤 의장에게 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줬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조사했지만, 윤 의장이나 주변인이 이 수표를 사용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또 문이 열린 사무실에서 돈

을 챌다는 고소인 주장의 개연성도 떨어진 것으로 봤다.

검찰은 "고향 후배에게 후원금 형식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윤 의장이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교육 위원회로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함께 고소된 자방신문사 기자 2명도 고소인이 "돈을 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고소를 취하해 무혐의 처분했으며, 전직 선거운동원 최모씨는 취업 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조치 알리지 않고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한 경

우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 수신료 합의 '없던 일로'

김진표 원내 등 지도부 독단처리 최고위서 반발

민주당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원회는 23일 원내대표 등이 전날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한나라당과 합의한 KBS수신료 인상안을 파기하며, 오는 28일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 실력 저자기로 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조치 알리지 않고 수신료 인상안을 독단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극한 방법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나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나아가 한나

라당이 오는 2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

서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 처리할 경

우 물리적 저지도 할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전날 합의를 완전 폐기했다.

이 같이 전날 여야 원내 수석부대

표 간 합의가 바로 뒤집힌 것에는 김 원내대표는 당 안팎 분위기를 모른

채 손 대표에게 조치 알리지 않고 수

신료 인상에 독단적으로 합의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

당의 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 극한 방법으로 저지

하지 않겠다는 (노영민 원내 수석부

대표의) 발언이 나왔던 것"이라고 해

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